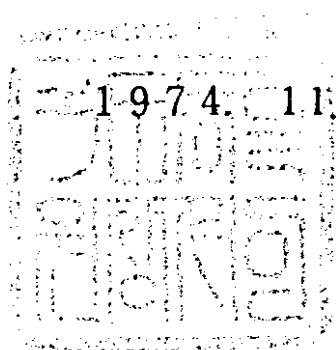


韓半島 平和問題와 4大國關係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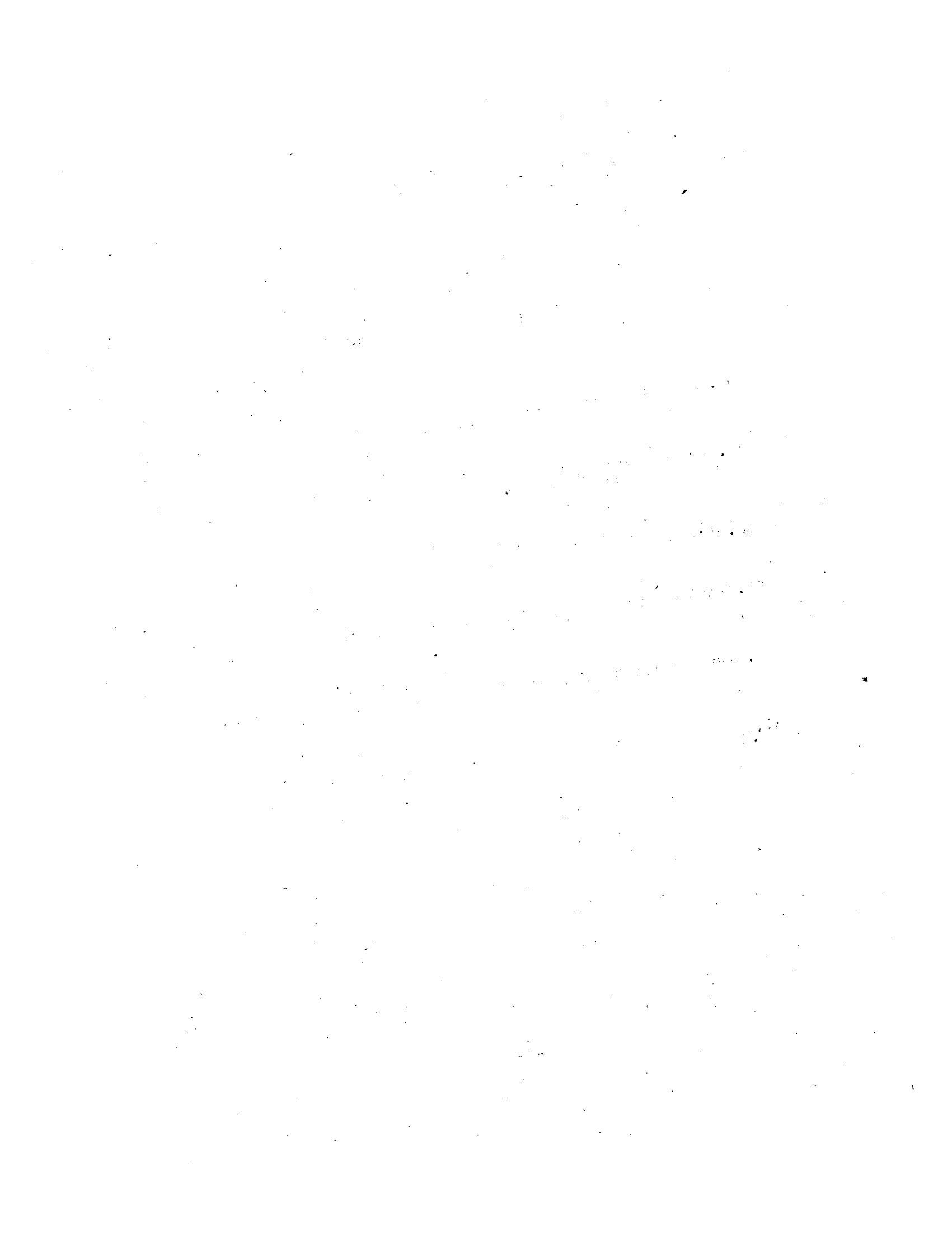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연구기관 : 고 려 대 학 교
연구책임자 : 김 경 원

目 次

I . 序 論	3
II . 4 大國의 對韓半島政策	8
III . 中 · 蘇의 對아시아政策概念	30
IV . 韓半島平和體制를 위한 對案	42
V . 韓半島平和體制的 基本方向	56
VI . 結 論	61



I. 序 論

韓半島의 平和問題는 平和라는 概念이 지니고 있는 多様な 의미에 따라서 여러가지 次元에서 論議될 수 있다. 우선 그것이 南北韓間의 "永久平和" 或은 完全한 形態의 平和를 의미할 경우 韓半島平和論은 統一論과 一致될 것이다.

韓半島의 歷史와 分斷의 政治·經濟·文化的 不合理性에 비추어 南北韓의 完全한 再統合이 達成되지 않고서는 韓半島內의 平和威脅因素가 完全히 除去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 「칼·도이치」와 같은 學者들이 제기한 바 있는 安全共同体 (Security Community), 즉 南韓과 北韓이라는 두개의 政治體間에 相互武力行使를 위한 準備가 되어있지 않는 狀態의 共同体가 形成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美國과 캐나다間의 關係가 이러한 平和의 전형적인 例라 할 수 있으며 우리側에서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機能的인 統一方案에 있어서 政治的 統合 直前의 段階가 이런 安全共同體의 狀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段階의 平和는 南北對話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南北의 緊張이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狀況에서 볼 때, 將來를 向한 하나의 「비전」은 될 수 있어도 現實的인 平和案은 못될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時急히 追求해야 할 現實的인 平和는 가장 소극적 의미의 平和 즉 南北韓間의 戰爭抑止와 緊張의 緩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南北韓이 直接對話 및 其

他的 方法에 의해서 分斷이라는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解消」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戰爭의 再發이나 繁長의 高조도 이러한 統一努力 내지 「完全 平和」에의 接近을 無効化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消極的 의미의 平和야말로 韓半島平和問題의 基本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統一없이 는 언제나 不安全한 平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반면 戰爭抑止라는 消極的 의미의 平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보다 높은 段階의 平和 즉 統一에 이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韓半島의 平和体制은 戰爭抑止를 그 基礎로써 確保하면서 이것을 統一이라는 現想的 型態의 平和에 연결시킬 때 健全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틀속에서 韓半島平和体制에 관한 몇가지 基本問題들을 檢討해 보자.

우선 統一을 包含한 어떠한 形態의 韓半島平和体制도 南北韓關係와 周辺情勢 즉 美·蘇·中·日의 4大國關係의 兩側面에서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二重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半島의 緊張과 戰爭危險은 美·蘇 및 美·中共의 東北亞에서의 對立이 그 원인이 되어 오늘날 4大強國의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利害關係의 對立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体制과 理念을 달리하는 南北兩政治體間의 對決의 極端的 表現이기 때문이다. 韓半島의 內的要因과 外的要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緊張의 두가지 要因 중에서 어느것이 더 本質的이고 重要하며 따라서 먼저 解決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見解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중 어

느하나를 무시한채 韓半島에 平和體制가 構築될 수 없다는 것은
 오늘의 韓半島情勢에 비추어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1970
 年 朴大統의 八·一五宣言 이래 우리가 追求해 온 統一政策을 이러한
 觀点에서 볼 때,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信賴回復」을 위한 相互誹
 謗 및 武裝挑發中止를 規定한 七·四南北共同聲明이 南北韓關係의
 緊張解消를 目標로 한 것이라면 北韓의 國際社會參與不反對意思와
 韓國의 中·蘇를 包含한 共產圈과의 關係改善用意를 천명한 1973年
 의 六·二三宣言은 4 大國關係의 解決을 追求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韓半島平和問題의 解決을 위한 政策의 基本路線은
 이미 提示되어 있는 것이고 이의 具現을 위한 具體的인 方法과
 節次가 오늘날의 問題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論에서는 上記한
 두개의 解決方向中 특히 4 大國關係에 重點을 두어 韓半島의 平和問
 題를 具體的인 方法과 節次라는 面에서 다루어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韓半島平和問題에 관한 몇가지 問題
 點을 提起할 수 있다. 우선 南北韓關係의 側面에서 볼 때 平和驅
 逐이란 두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는 南北韓의 敵對的인
 理念體系가 어떻게 相互間의 存在를 認定하고 서로 對話를 할 수
 있는가 하는 相異한 體制間의 平和共存의 問題이다. 이러한 理念間
 의 共存이 南北韓關係에서 이룩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가 다른 하
 나의 消滅 내지 併呑을 추구하게 될 수 밖에 없으므로 兩側間의
 緊張解消는 이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念間의 共存
 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南北韓間의 힘의 심한 不均衡
 이 發生하면 優勢한 側이 劣勢한 側을 軍事的으로 統合할 유혹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南北關係의 平和는 理念間的 共存뿐만 아니라 現實的인 勢力均衡의 面에서도 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逆으로 勢力均衡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理念間的 共存原則이 南北韓關係에서 確立되지 않는다면 비록 熱戰의 段階는 아니더라도 休戰協定 이후의 近 20年間 持續되어 왔고 또 南北對話가 교착상태에 빠진 1973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極端的인 敵對的 對決과 같은 緊張狀態만이 存在할 것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關係에 있어서 理念間的 共存과 勢力均衡은 車の 앞뒤 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그 어느 하나를 매놓고서는 韓半島平和體制라는 車가 전진할 수 없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關係라는 側面에서 韓半島平和問題에 接近할 때는 民主·共產 兩理念間的 平和共存과 南北韓 兩政治體制間的 勢力均衡을 同時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韓半島의 周邊情勢 즉 美·蘇·中·日의 4大國關係가 韓半島平和構築에 미치는 影響을 制約과 變化促進이라는 두가지 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南北韓分斷 이후 과거 4半世紀에 걸친 美·蘇, 美·中共의 冷戰秩序는 南北韓關係의 어떠한 改善可能性도 制約해왔으나 1970年을 前後한 美·蘇, 美·中共和解外交의 進전은 南北韓關係의 緊張緩和를 促求하는 方向으로 作用하여 八·一五宣言, 七·四共同聲明 그리고 六·二五宣言으로 이어지는 對北平和政策을 推進할 수 있는 國際的背景이 되었던 것

이다. 韓半島周邨에 美·蘇·中·日의 4強體制가 形成되고 그것이 상당한 程度로 勢力均衡上의 原則을 追求하게 된 오늘날의 4大國關係는 制約과 變化라는 두가지 方向의 影響을 韓半島平和問題에 同時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4大國은 現在의 不安하고 緊張되어 있는 韓半島上의 勢力均衡을 보다 安定된 形態의 勢力均衡例를 들면 4大國의 平和保障이라든가 「로카르노」條約과 같은 平和體制를 추구하는데 關心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4大國關係가 韓半島의 緊張狀態를 보다 緩和해 주는 變化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4大國의 勢力均衡追求努力이 南北韓間의 平和를 促進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의 平和體制進展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既存 勢力關係의 現狀(Status Quo)에 어떠한 變化를 要請하는 것으로서 4大國의 勢力均衡追求는 이러한 現狀變化의 程度와 速度를 制約하는 結果가 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韓半島에 平和體制를 構築하려는 우리의 政策은 4大國關係가 미치는 이러한 變化와 制約을 잘 認識하여 이와 調和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4大國의 韓半島政策을 正確히 把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論에서는 4大國의 對韓半島政策을 檢討하여 이를 基盤으로 韓半島平和體制의 基本方向을 推出해본 다음 可能한 政策代案을 提示해 볼까 한다.

II. 4 大國의 對韓半島政策

가. 美 國

第二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의 對韓政策은 크게 나누어 三段階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太平洋 戰爭의 終息으로부터 6.25 動亂이 始作될 때까지를 第一段階로 본다면, 動亂 以後 1960 年代末까지를 第二段階, 그리고 1969 年 「닉슨 독트린」以後를 第三段階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第一段階에서 美國의 對韓政策은 目的意識이 定立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內의情勢에 對한 正確한 理解를 欠하고 있어서 彷徨과 混亂 그리고 失手の 連續으로 特徵지을 수 있는데 반하여 第二段階에서의 對韓政策은 놀라운 정도로 積極的인 介入姿勢를 보여왔다. 美國의 이러한 姿勢轉換에 있어서 決定的인 契機가 된 것은 1950 年 北韓共產軍의 奇襲攻襲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美國은 韓國動亂의 結果로 亞細亞에 있어서 共產陣營과의 積極的인 對決의 姿勢를 取하였으며 특히 亞細亞共產主義의 代表的 存在인 中共에 對해 이른바 封鎖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는데 冷戰時期의 對韓政策은 바로 이러한 對共產國政策으로 理解될 수 있다. 美國은 動亂後 韓美防衛條約을 비롯해서 ANZUS 同盟條約, 美·「필리핀」防衛條約, 美日安保條約, SEATO 同盟條約 및 美·自由中國防衛條約 등을 체결함으로써 中共을 封鎖하는 同盟體制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韓國에 對해서도 60 年對末까지 約 350 億弗에 達하는 經濟 및

軍事援助을 하는 積極的인 對韓政策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50年代와 60年代의 美國의 對韓政策의 積極性은 1953年 韓美防衛條約에서부터 1969年의 「朴·「닉슨」共同聲明書」에 이르기까지 兩國家間의 一聯의 條約과 協定, 議定書, 그리고 共同聲明書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積極的인 對韓政策의 基底에는 상당한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1953年 韓美防衛條約은 韓國政府가 休戰協定을 받아들이는데 對한 一種의 補償으로 체결되었던 事實과 美國의 韓國戰介入도 韓國自體의 重要性보다 「아시아」防衛의 一環이었던 事實을 勘案한다면 美國은 韓國의 戰略的價値에 對한 뚜렷한 評價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美國이 韓國에 對하여 積極的 政策을 取한 것은 韓國自體의 戰略的 重要性 때문이 아니라 共產威脅에 對備해야 하는 것이 重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美國은 對韓政策의 論理를 主로 理念的으로 定義하였다는 점이다. 「조지 케난」이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은 모든 對外政策의 目的을 「道德至上主義的 法律主義的」인 것으로 規定하는 傳統을 가지고 있어서 그 對韓政策도 善과 惡의 對決, 即 共產主義와 自由民主主義의 對決로 定義하였다.

이러한 美國의 對韓政策의 理念化는 韓國政府가 美國의 積極的인 對韓姿勢를 維持하기 爲해서는 美國政治文化에 一致하는 政治體制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莫重한 負擔을 意味했다. 따라서 美國이 韓國自體의 戰略的價値에 對한 뚜렷한 判斷없이 理念的動機에서만 積

極的인 對韓政策을 取해 왔다는 것은 이時期의 韓美關係에도 相當한 虛點이 있었다는 點을 암시해준다. 그러면서도 美國의 積極的인 對韓政策이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은 美國이 全般的인 反共政策을 追求하고 있었고 韓國이 美國의 政治文化的要請을 滿足시켜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美國의 支援을 必要로 하고 있었다는 事實로 說明될 수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冷戰期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政策이 中共封鎖政策의 一環이라고 할 수 있다면, 1969年 「구암 독트린」 (「닉슨 독트린」)에서부터 나타난 美國의 對中共政策에 있어서의 變化는 對韓政策에 있어서의 變化를 意味하지 않을 수 없으며 實際로 1970年代의 美中共 和解는 韓美關係에 있어서 否認할 수 없는 轉換期를 가져왔다.

「닉슨 독트린」에서 나타난 美國의 새로운 亞細亞政策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美國의 條約公約을 준수하지만 새로운 公約을 할 때는 美國의 利益을 신중히 計算하며 特히 亞細亞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威脅과 條件에 對한 反射的인 反應을 避한다. 둘째, 美國은 그 同盟國이나 美國安保에 必要한 國家가 核勢力의 威脅을 받게 되면 美國의 核抑制를 제공할 用意이 있다. 셋째, 其他形態(即 非核)의 侵略에 對해서는 주로 威脅받는 國家自身이 防衛를 爲한 人力을 提供하고 美國은 軍事的, 經濟的支援으로 이를 뒷 받침해 준다.

이러한 美國의 새로운 亞細亞政策의 原則은 對韓政策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고 解析할 수 있다.

첫째, 韓國의 自体防衛能力이 韓半島安保体制의 主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닉슨 독트린」의 骨子인 만큼 韓國軍의 機能強化 卽 現代化를 通해서 韓半島에 있어서 美國의 直接的 軍事的 役割이 代署된다는 點이다. 1971年부터 始作된 「韓國軍現代化」計劃과 駐韓美國의 減縮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 美國이 「닉슨 독트린」에서 美國이 條約任務의 遂行과 核保護 및 軍事的 經濟的支援을 公約하고 있음에 비추어 美國에 있어서 美國의 直接的인 軍事的 役割의 終熄은 間接的인 軍事的 役割의 終熄을 意味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卽 核保護란 韓半島에 있어서 蘇聯이나 中共의 直接的軍事行動을 抑制하는 것을 意味하며 條約任務의 遂行을 말하고 있는 것은 韓美防衛條約이 상징하는 基本的 戰略均衡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軍事的 및 經濟的支援이란 以上の 均衡을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的 支援을 提供할 用意가 있음을 뜻한다고 解析할 수 있다. 따라서 美國의 「닉슨 독트린」 적용은 새로운 勢力均衡의 出現을 容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戰略的均衡을 維持하되 그 具體的 機能構造에 있어서 美國의 地上軍의 役割을 止揚하겠다는 것이다.

「닉슨 독트린」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美國의 政策轉換은 軍事的인 面에서 뿐만아니라 政治的으로도 重要的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冷戰期의 美國의 對韓政策은 多分히 理念的이었는데 비해 70年代의 美國의 對韓政策은 特定한 政治体制 또는 理念의 守護者

라는 聖職者的인 使命을 포기하고 이제는 보다 現實政治의 次元에서 「安定」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目的을 追求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美國內에서의 理念指向的 外交政策에 對한 비판, 共產國家들과의 平和共存可能性 增大와 이의 有利한 側面, 그리고 文化的 相對主義와 狀況的論理 等으로 代表되는 美國的 屬善主義의 弛緩 等이 美國外交政策의 非理念化의 重要한 原因과 條件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非理化는 다음의 두가지 效果를 及及 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50年代와 60年代에 있어서 韓國政治體制가 美國政治文化의 要請을 滿足시켜야 하는 負擔을 지니고 있었으나 70年代에 있어서 그러한 負擔은 어느정도 減少된 것이 틀림없다. 美國의 對韓政策目的이 「安定」을 擔保하는데 있는한 韓國政治體制는 美國政治文化와 一致하는 構造를 표방하지 않고도 어느정도 순조로운 韓美關係를 維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美國의 對韓政策 目標가 반드시 反共이라는 理念에 있지 않고 安定을 意味하는 平和共存에 있다면 이는 南北韓關係에 對한 冷戰的觀念의 탈피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美國은 韓半島에서 安定을 維持하기 爲해 北韓을 직접 또는 間接으로 견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反共運動 그 自体를 전개하는데 目的을 두지는 않으며 이점이 바로 美國이 韓半島에서 南北對話를 積極적으로 歡迎하는 理由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美國의 對韓政策의 非理念化는 韓國政治體制에 對한 政治文化의 壓力을 어느정도 덜어준 반면, 南北關係의 再調整이라는 莫重한 課題를 提起했다

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美國의 對韓政策의 轉換方向을 어느정도 밝혔지만 앞으로 美國의 對韓政策은 美國의 現在의 目的意識 뿐만 아니라 美國의 國內情勢와 國際的環境의 變化에 따라 影響을 받게 될 것은 自明하다. 美國의 國內政治에서 앞으로 重要한 點은 孤立主義의 傾向과 對外政策의 再理念化可能性 여부라고 할 수 있다. 前者는 越南戰에 對한 反應이며 美國外交史에서 週期的 「패턴」으로 나타나는 積極主義에 對한 反應으로 解析할 수 있는데, 더우기 戰略的特性과 長距離輸送能力을 考慮하면 美國의 國內情勢는 역시 積極的介入은 배척하는 方向으로 展開될 것이 틀림없다. 美國外交政策의 再理念化可能性은 萬一 「데탕트」政策이 失敗하는 경우 右翼勢力에 依한 反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強大國間의 戰略的利害關係의 基本構造에 基礎한 「데탕트」政策이 失敗할 확률이 적은 만큼 그런 가능성이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美國對外政策의 國際的環境에 重要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變化로서는 中蘇間의 再接近, 日中共 또는 日蘇 「앙탕트」의 出現等を 들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란 極히 적다는 것이 大部分의 專門家들의 견해인 것 같다. 따라서 美國의 國內, 國際的環境 兩側面에서 모두 美國의 現在의 對韓政策이 繼續維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할 點은 最近 韓美經濟交流의 統計로 미루어 볼 때 美國에 對한 韓國의 重要性이 增加하고 있으며 (美國의 輸出 對

象國으로서 韓國의 順位는 11位이다) 國際体制의 構造가 勢力均衡으로 發展한다면 韓半島는 「均衡의 決定的要素」로 作用할 可能性 때문에 傳統的으로 亞細亞에서 勢力均衡을 追求해온 美國의 立場에서 보면 兩極体制에서 보다 多極体制下에서 韓半島의 戰略的인 重要性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結果적으로 美國의 對韓政策의 脫冷戰化傾向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韓半島에 對한 基本的인 關心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나. 蘇 聯

太平洋戰爭末期에 對日戰에 參戰하여 38度線 以北에 占領軍을 駐屯시킬 수 있었던 蘇聯은 韓半島와 隣接한 強大國이라는 利點을 最大로 利用하여 帝政「러시아」 이래의 野心이었던 積極的인 韓半島政策을 追求할 수 있었다. 당시 亞細亞情勢는 莫強을 자랑하던 日本이 敗亡하고 中國大陸은 內戰의 피해로 蘇聯의 競爭國이 될 수 없는 狀況속에서 蘇聯은 美國의 影響力만을 38度線以南으로 制限시키면서 北韓을 衛星國化하여 極東의 발판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은 北韓에 進주한 後 한면으로는 美國과의 韓半島問題協商에 應하여 時間을 벌면서 그 期間에 北韓地域을 急速히 共產化시키고 이에 大量의 軍事·經濟援助를 提供하여 金日成의 6.25南侵에 機會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5動亂의 結果는 美國의 韓半島政策을 積極化시킨 반면 蘇聯의 韓半島에서의 優勢했던 地位를 두가지 面에서 弱화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韓半島와 其他「아시아」地域에서 消極的인 姿勢를 보이던 美國이 6.25를 契機로 UN의 깃발아래 積極介入함으로써 蘇聯의 韓半島에서의 立場이 相當히 守勢에 몰리게 되었으며, 둘째로 中共이 北韓전에 參戰하여 UN軍을 압록강에서 休戰線까지 後退시키는데 直接的인 役割을 하게 되어, 北韓에 對한 影響력에 있어서도 蘇聯은 中共이라는 競争國을 맞이하게 되는 結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1960年代부터 始作된 中·蘇理念紛爭을 利用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이른바 自主路線을 追求하여 中蘇사이에서 等距離外交를 取하려고 努力하게 되자 蘇聯의 北韓에 對한 政治的 影響力은 더 한층 抑制되었다고 할 수 있다. 勿論 蘇聯은 北韓의 軍事的必要를 提共해주고 經濟的으로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位置에 있으므로 60年代 以後 蘇聯 - 北韓關係의 後退가 相對的인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또한 蘇聯의 이러한 相對的인 影響力後退가 蘇聯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美國의 積極的介入과 中共이라는 經濟勢力의 登場 等 狀況的 要素에 依하여 強制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障礙가 緩化될 境遇 蘇聯은 언제든지 韓半島에 對해 積極的인 影響力確保를 追求할 可能性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1960年代에 이르러 蘇聯의 北韓에 對한 影響力이 여러가지 狀況的要素에 依하여 다소간 減少되었지만 韓半島에 對한 蘇聯의 關心自体가 줄어들지는 아니라는 事實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가지 理由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蘇聯은 韓半島에 隣接한 「아시아」國家로서 帝政「러시아」

이래 南進政策을 追求하여 伝統的으로 韓半島에 對해서 같은 關心을 가져왔다는 事實이다. 共產革命以後 「러시아」의 이러한 膨脹主義 的인 性格은 世界 「프로레타리아」革命을 完成함으로써 「유로피아」 的인 Pax Russiana를 建設해야겠다는 이른바 社會帝國主義的 性格으로 理念의 變化를 겪었을뿐 그 實體는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中蘇對決이라는 側面에서 韓半島가 蘇聯의 理念의 擴大點이라는 點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點에서 볼 때 1970年 및 戰略的 政治的 利害關係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이 過去에 比較 的 增大了다는 點이다. 「미앙프」에 따른 韓半島 주변 勢力均衡과 類似한 4大國 體制의 出現은 韓半島에 對한 蘇聯의 政策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點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새로운 多極體制의 出現은 그 體制의 非理念化傾向으로 蘇聯의 北韓에 對한 立場을 보다 선택적이고 同時에 自由로운 것으로 變化시켰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 多極化 體制下에서는 理念의 인 支援보다 實際的인 支援을 더 必要로 하게 된 반면 蘇聯에게는 理念的 攻擊을 두려워할 理由가 적어져서 比較 自由로운 立場에서 北韓의 「自主路線」에 대치해나갈 수 있다고 보 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多極體制의 非理念的 性格과 韓半島에서 美 國의 직접적 介入 止揚은 蘇聯으로 하여금 그의 對韓半島政策이 北韓 뿐이 아니라 南韓에 對해서도 어떤 接觸과 影響力을 追求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蘇聯이 北 韓에 對해서만 關係를 가진 것은 그의 政策目的이 北韓地域에만 限 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美」의 對韓關係와 美 國

의 직접介入으로 南韓地域에 對한 어떠한 움직임도 取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蘇聯의 對美, 對日政策의 유연화를 爲해서는 南韓에 對해서도 어느정도의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蘇聯의 새로운 對韓姿勢를 促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考察할 때 70年代의 國際的環境속에서 蘇聯政府가 取할 수 있는 對韓半島政策에는 過去에 比하여 상당히 많은 代案이 可能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代案들을 檢討해보고 各各의 可能性을 予見해 보기로 한다.

첫째 蘇聯의 過去와 같이 北韓의 統韓政策만을 支持하고 韓國의 統一外交政策에 敵對적인 立場을 取하는 境遇이다. 그러나 代案은 蘇聯의 「스타린」時代의 冷戰論理로 復的하기 前에는 生覺할 수 없으며 特別히 蘇聯이 現在와 같이 美國과 日本의 歡心を 사고 經濟的 支援를 받으려고 애쓰는 狀況에서 生覺하기 어려운 代案이다.

둘째로 蘇聯政府가 北韓과 國交를 斷絶하고 韓國과 손잡아 北韓 孤立化政策에 協調하는 경우이다. 韓國의 「아시아」集團安 保體制에 積極參與하고 北韓이 中央과 함께 극렬한 反全行爲를 할 때 考慮해 볼 수 있는 代案이다. 그러나 中·蘇紛爭의 限界가 있고 또 北韓이 蘇聯과의 斷交를 감수하면서 까지 中共和 密着하는 境遇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代案을 蘇聯이 取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은 것 같다. 더구나 中共도 蘇聯과 對決하는 立場에서 美國이나 日本의 歡心を 喪失하면서까지 北韓을 支援할 수 가 없는 立場에 있음을 生覺하면 더욱 그렇다.

세계 蘇聯이 南北韓에 對해 嚴正中立의 位置에서 等距離外交關係를 維持하는 경우이다. 4大國이 어떤 合意를 通하여 南北韓에 對해 等距離外交를 하는데 共同步調를 取하기로 決定한 경우 또는 蘇聯權力層內部에서 進歩派 온건派가 完勝하여 蘇聯이 完全히 修正主義路線을 다르기로 決定했을 경우 이런 政策代案의 追求가 可能할 수 있다. 이러한 事態를 對備하여 韓國政府는 6.23 宣言에서 互惠平等의 原則으로 相互間에 門戶開放을 提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여지껏 北韓만 一方的으로 支援해온 蘇聯으로서 南北韓等距離外交는 北韓敵對政策을 取하는 것과 닮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代案을 追求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 말이 等距離外交이지 아무래도 美國이나 日本이 韓國을 두둔할 것이며 中共과 蘇聯이 北韓側을 편과적으로 支援할 것임은 의심의 余地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現實的인 政策代案이 남게 된다. 卽 蘇聯이 北韓과 從前과 같이 긴밀한 紐帶 協助關係를 가지면서 韓國政府하고도 多邊的인 關係를 發展시키는 것이다. 事實 蘇聯의 立場에서 는 韓半島에 統一政府가 세워져서 그것이 中共이나 다른 強大國에 密着되어 버릴 危險을 갖는 것보다는 分斷된 채로 남아서 中共이 中共이 北韓과 손잡는 경우라든 蘇聯이 韓國에 對하여 어떤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경우가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立場을 理解할 때 蘇聯이 韓國의 6.23 宣言에 對해 이를 敵對할 아무런 理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蘇聯은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에 이러한 對韓國 關係發展에 積極的인 「이니시아티브」를 取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본다. 그것은 첫째로 美國과 日本의 經濟支援과 科學的 技術的 協調를 크게 必要로 하는 「브레즈네프」政權으로서는 美日兩國에 對하여 國際秩序 變化를 爲한 「이니셔티브」를 取하기 어려우며, 둘째로 中共의 비난과 北韓의 의구심을 무릅쓰면서 對韓國接近을 積極적으로 主導할 立場이 못되기 때문이다. 蘇聯이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消極적으로 北韓을 支援하고 있다가 機會가 許容될 때 韓國政府에도 友好와 善隣關係를 맺으려고 할 것 같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蘇聯의 最近 對韓半島政策은 北韓과의 既存關係를 維持하면서 狀況과 機會가 주어진다면 韓國과의 關係改善 및 增進을 反對하지 않을 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中 共

後進國에의 革命輸出論이 問題가 되고 있긴 하지만 1971年까지 中共의 對外政策은 대체로 「防禦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中國의 近代史를 검찰한 列強의 侵略經驗과 美國의 大陸封鎖는 中共의 對外的姿勢를 一次的으로는 防禦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크기는 韓國動亂에의 參加에서부터 작게는 1969年 中·蘇國境衝突에 이르기까지 中共의 對外的軍事行動은 대체로 自体防衛가 一次的의意圖였다고 보여진다. 問題가 되는 後進國에서의 革命運動支援의 경우에도 中共은 「自力革命論」, 即 革命은 해당地域 共產主義者의 任務라는 立場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中共은 대체로 接統地域에서의 狀況이 自体에 對한 직접적인 威脅이 되지 않는 限에서 隣接地域事態에 露骨的인 介入을 可及的 回避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論을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性格에 適用하는 데는 한가지 注意를 要할 것 같다. 왜냐하면 中共이 韓國戰休戰以後 韓半島內의 共產革命에 對하여 金日成에게 一次的인 管理權을 認定해 준 것은 「自力革命論」이나 또는 韓半島의 事態가 中共에게 別 威脅이 안된다는 判斷에 起因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中蘇對立이, 北韓으로 하여금 어느 一方의 支配에 屬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을 可能性이 더 짙기 때문이다.

何如든 休戰協定 以後 中共은 韓半島統一에 關하여 北韓이 내거는 口號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으며 韓國에 對하여는 아직도 北韓다음으로 가장 敵對的인 態度를 보여왔으며 1970年 以後 美 中共關係改善 以後에도 이런 基本立場에는 變化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中共의 美國과의 關係改善과 이에 따른 UN에서의 中國 代表權獲得 以後의 中共의 國際地位向上은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附隨的 效果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即 中共의 國際的地位 向上에 北韓이 便乘할 수 있는 機會가 생겼고 여기에 中共이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後見者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美·中共「데탕트」 以後 北韓이 지금까지의 閉鎖와 孤立에서부터 多角度的 國際的 關係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多極化世界에서의 一般的 「패턴」을 쫓는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背後에서 中共이 實際로 強力한 後見者의 役割을 하고 있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다. UN에서 第3世界의 「리더」로 차치하는

韓半島問題는 中共의 다른 地域問題에 의하여 연계되지 二次的 或은 中共의 경우는 北韓의 蘇聯密着을 막는 것이 目的이고 또 中共에게 點이다. 即 北韓은 對南攻勢와 赤化統一이 主目的이요 關心이겠으나 로 부르짚고 있지만 그 根本 目的에는 差異가 있을 수 있다는

첫째, 現在 中共이 韓半島統一問題에 있어서 北韓의 12號를 그대 限界點에 다마를 것이 予想된다.

理由 때문에 中共이 北韓에게 주고 있는 이와 같은 效果는 곧 그 여 外交的 實效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替換 「平和協定」의 締結을 提議하는 등 南韓의 孤立化마저 試圖하 機會를 얻었으며 對日接近은 勿論美國에 對하여도 韓國休戰協定에 代 表 UN에 「응징 버」資格으로 招請되고 또 많은 國家와 關係改善의 이에 應했을 可能이 많다. 사실 北韓은 中共의 進出에 便乘함으로써 에서 南韓의 唯一合法性은 위축될 것임을 北韓에 說得하고 北韓은 國들과 關係를 改善함으로써 北韓의 國際的地位를 向上시키고 UN 있다. 中共은 北韓에 對하여 中共의 外交「모멘」에 따라 非共產 撥과 므로 因한 對蘇密着을 防止하려는 計算이 깔려있다고 볼 수 者役割을 하고 있는 데는 中共의 對美接近에 對한 北韓의 可能的 反 中共이 이처럼 北韓의 非共產國에 對한 進出에 橋梁 내지 後見 事實이다.

로 北韓과 外交關係를 이루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음은 注目할만한 의 強力한 影響下에 있던 ASEAN 國家들도 中共과, 그리고 漸次的으 은 例이며 지난 5月 「말레이시아와 中共의 國交樹立에 뒤이어 美國 中共이 北韓을 爲해 幕後交涉 및 支援演說을 하고 있는 事實이 중

三次的인 關心對象으로 疎外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最近에 事態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北韓의 各種 對南 武力挑發行爲는 그 目的이 如何間에 北韓이 表面에 내건 統一方案을 中共이 繼續 支持하고 宣傳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問題를 던져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째, 中共이 美國을 비롯한 非共產國과 關係改善을 推進한데에는 치밀한 計算과 準備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北韓의 경우는 東西緊張緩和의 추세에 被動的으로 應한 것이고 이에 適應할만한 充分한 準備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非共產國에 對한 進出은 現在와 같은 接觸段階에서는 별다른 問題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擴大는 北韓이 이제까지 取해온 이제까지의 好戰的立場을 포기해야 하므로 北韓에게 많은 負擔을 줄 것이다.

네째, 韓國이 中, 蘇에 接近하는데 限界가 있는 것처럼 北韓도 韓國과 同盟關係 내지 緊密한 關係에 있는 美日과 關係를 改善하는데는 中共이 美日과 接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點이다. 勿論 現在로 봐서 美國과 日本의 開放性 때문에 韓國이 中蘇에 接近하는 것보다 北韓이 美日에 接近하기가 容易할 것 같은 感이 없지 않다.

以上으로 1970年 이래 美中共緊張緩和가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 作用한 效果와 그 限界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앞으로 어떠한 方向을 取할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中共政策에 影響을 미칠 內外的要因을 檢討해보자.

먼저 中共의 「리더십」의 變動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다. 高齡에 이른 「毛沢東」이 死亡하는 경우 王洪文, 姚文元 혹은 江青등 과격파가 執權을 할 것인지 周恩來系의 穩健派가 執權하느냐에 따라 그 對外政策도 變化할 수 있다.

이에 關하여 Donald Zagoria는 現在 中共党内에서 큰 勢力을 가진 過激派가 實權을 掌握하면 中蘇關係가 더욱 惡化되고 美中共關係도 威脅을 받을 것이고 穩健派가 毛를 繼承할 경우에는 美·蘇에 대하여 共히 「테방뜨」를 推進하리라 보고 있다. 어쨌든 現在 毛의 남은 最大關心事가 어떻게 하면 自己의 革命思想을 死後에도 中共에서 繼續시킬 수 있을가 하는 点이고 党内에 美国과의 「테방뜨」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過激派가 多數를 占하는 現實情에서 毛가 死亡한 후 美国과의 緊張緩和가 더 進展되리라 確信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中共의 經濟力이 韓半島 周辺의 다른 強大國에 比하여 가장 劣勢에 있고 核彈頭유도탄과 같은 武器開發과 配置에 있어서도 敗政問題로 美·蘇와 比較가 안되며 (例를 들어 1972年 中共의 總 國防予算은 約 100 億弗인데 비해 1973年 美国은 新種武器開發에 1,300 億弗이었다) 이러한 劣勢는 中共이 앞으로 對韓半島 政策에 積極的 攻勢로 나오는데 있어서 커다란 障礙要因이 될 것 같다.

다음으로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 影響을 미칠 外的要因을 檢討해 보자, 現在 中共은 北韓의 主張을 支持하여 「南韓으로부터 美軍을 即時 撤收하라」는 口號를 외치고 있으나 美国의 撤收後 日本

의 재武装이나 蘇聯의 進出을 憂慮하여 오히려 美國의 「아시아」에 남아서 日·蘇를 견제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一般적인 觀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이 이를 拒絶하고 日·蘇가 계속 中共의 威脅의 存在로 發展할 때 中共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武力的紛爭을 可及的 避해야 할 立場에 있는 中共으로서

- (1) 中共은 自體의 劣勢때문에 韓半島問題와 關聯하여 積極攻勢를 기피하고 있다.
- (2) 中共은 現在立場에서 紛爭의 介入을 願치 않기 때문에 韓半島에 있어서의 紛爭을 願치 않는다.
- (3) 中共은 韓半島에서 急激한 變化를 願치 않는다. 急激한 變化는 紛爭의 原因이 되기 때문이다.
- (4) 現在에 있어서 中共의 危險한 敵은 蘇聯과 日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5) 北韓이 蘇聯에 密着하지 않는 한 中共은 韓國과의 接近을 피하려고 할 것 같다.

東南亞中立地帶案을 提議하는가 韓半島에 對하여는 美·中·日·蘇, 四大國保障의 中立化 統一 등을 推進할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此外에도 여러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였으나 以上の 論議만을 綜合해볼 때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을 大略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 日 本

日本은 GNP 世界 三位라는 産業力을 保有한 点에서 經濟大
國이라 할 수 있으나 軍事的, 政治的 의미에서 強大國이라고는 아
직 볼 수 없다. 그럼에도 韓半島 問題에 관한 한 日本을 強大
國으로 認識하는 것은 日本의 韓半島 關係가 韓·美·日의 三角關
係속에서 成長해왔고 특히 日本의 對韓投資가 그 全對外投資額의
25.5%를 占하는 經濟的 特殊關係에서 오는 既得權의 效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年 以前까지 이런 特殊關係는 政經分
離原則의 교묘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南韓一辺側的이었음은 말할 것
도 없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東西緊張相 趨勢와 이에 따른 韓國의 對
北韓 및 對共產圈 門互開放原則 宣言은 이러한 日本의 韓國一辺側
關係를 全韓半島政策의 次元으로 밝혀주었고 南北韓 “等距離外交”
의 口實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韓半島政策의
幅이 增大하려면 日本이 保有하고 있는 産業力을 政治資本化시켜야
하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日本의 새로운 對韓半島政策은 日本外交
의 이러한 基本問題속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 같다.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日本이 노리는 가장 큰 戰略은 強大國으로
의 발돋움, 즉 우선 美國과의 關係에서 同等한 「파트너」로서의
待遇를 추구하고 다른 亞細亞 關聯強大國인 .中. 쏘와 同等한 位置
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韓半島가 統一되는 어떤 形態
로든지 平相體制를 構築할 때 日本은 美·中·쏘와 나란히 韓半

島에서의 既得權과 이에 얽힌 日本의 国益을 伸張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향이 日本이 1957年以來 표방해 온 日本 外交의 三原則, 즉 UN中心의 外交, 西歐 自由 陣營과의 緊密한 協調, 그리고 「아시아」圈에서의 確固한 位置 確保에 이명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이중에서 西歐 自由陣營과의 緊密한 協調는 事實上 日本의 對美 關係가 中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은 戰後 그 安保를 美國에 依存함으로써 經濟的 繁榮을 누렸으나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介入 減少努力과 日本의 政治大國으로서의 役割 追求는 이러한 既存關係의 變化를 가져 온 것은 물론이다. 現在로서 볼 때, 美國과의 關係惡化에 따른 日本의 核武器 開發과 独自の 武裝 可能性, 아니면 美國과의 協調下에 美軍의 「아시아」로 部隊의 漸次的 派兵을 備하기 위한 日本 自衛隊의 擴張 및 核武器 可能的 두가지 場邊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두가지 場邊가 모두 日本憲法 第九條 등 戰爭을 위한 軍備와 交戰權 포기에 制限된다는 制約을 갖고 있으나, 日本政府는 이미 防禦用武器 保有는 避讓이 아니라는 聲明을 낸 바 있으며 1970年 2월에 署名한 바 있는 核拡散防止條約의 비준을 避延시키고 있는 事實을 볼 때 日本이 어떠한 理由, 어떠한 形態로던 日本의 經濟力에 相應하는 軍事力 保有에 努力할 것임은 거의 確美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關心事는 日本 自衛隊의 海外 派遣 問題이다. 이 問題는 1974년까지 日本政府에 의해 계속 避讓이라는 理由로 그 可能性이 排除되었으나 最近

에는 이를 UN憲章을 援用하여 合憲적으로 해석하려고 試圖해 왔음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關聯하여 日本의 對 UN 外交를 살펴보자. 日本은 처음에는 UN의 集團安保機能에 기대를 걸었으나 後에는 急速한 經濟成長에 힘입어 UN에서의 發言權 強化를 통하여 日本의 政治的 地位 向上에 注力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빈번히 安保理事회의 非常任理事國으로 選出되고 거의 繼統적으로 經濟社会理事國으로 활약해온 日本은 UN參與 17년이 넘는 오늘날 그 對 UN 政策에서 두가지 課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拒否權이 없더라도 安保理事會 常任理事國이 되려는 갈망이 1969年以來 日本의 UN 政策의 가장 큰 目的이 되었다. 日本은 이 目的을 위해서 強大國과의 和解는 물론 UN會員國 大多數의 意思에 어긋나는 政策의 追求는 止揚해야 한다는 부담을 그의 對 UN 政策에서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即 26次總會에서 中共加入問題에 美國案을 支持함으로써 비롯된 外交的 減点を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앞서 言及한 바 있는 日本 自衛隊의 海外派兵을 위한 法理論上의 妥當性을 찾는 問題이다. 1964年 19次 UN總會에서 日 外相 「藤山」는 UN憲章 第7章에 規定한 UN常備軍의 設置를 支持한다고 演說하고 日本은 이러한 常備軍에 憲章 第6章에 規定된 平和的 紛爭 해결을 위해 軍隊를 派遣할 수 있다고 하였다. 日本은 軍事的인 平和體制를 위한 UN常備軍에 自衛隊를 參與시키는 것은 “派兵”으로서 違憲이지만 平和的 紛爭 解決을 위한 UN行

動에 參與하는 것은 派遣으로서 避憲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새로운 해석을 내림으로써 自衛隊의 海外進出 可能性을 터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韓半島의 4 大國과의 關係에서 볼 때 단순한 修辭學的인 問題가 아니고 實際的 保障體制와 關連되는 問題로써 重要한 意味를 지닌 것이다.

以上에서 日本 外交의 대체적 運轉을 살펴보았거니와 그러면 이러한 脈絡속에서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은 어떤 것인가.

1973 年度 日本의 外交靑書는 "韓國과의 協力關係를 維持할 것이나 이와 同時에 北韓과의 接觸에 대해서는 극히 細心한 配慮를 하고 이를 漸進的으로 擴大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同時에 "日本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強하게 念願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쨌든 이와 같은 表現과 日本의 여러가지 利害關係를 綜合해 볼 때 日本의 韓半島 政策은 다음의 세 가지 方向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日本은 政治, 軍事的으로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現狀維持를 追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은 統一된 強力한 韓國을 日本에 대한 安保威脅으로 간주할 것은 물론이며 그보다는 統一된 韓半島가 中, 蘇등 다른 強大國과 연결될 可能性을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또한 日本은 統一에 따른 어떤 韓半島 保障體制 參與를 위한 自衛隊 海外派遣問題가 國際, 國內政治的으로 完全解決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이 解決될 때까지는 現狀維持를 願할 것 같다. 日本은 이러한 政策의 일환으로 韓半島에 대한 UN 平和監督機構에 參與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둘째, 經濟的인 面에서 日本은 이제까지 韓國一辺倒的이었던 關係를 全韓半島 政策의 次元으로 擴大하기 위한 方法으로써 從來 韓國과의 經濟協力 方式을 바꿀 것 같다.

즉 從來의 多分히 對韓國 補償樣式으로 비롯되었던 對韓經濟協力の 特殊關係를 石油波動 以來 日本經濟의 困難과 또한 經濟植民國의 「이미지」를 払式한다는 구실로 IECOK나 아세아 銀行等を 통한 多元的이고 一般的인 形態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日本은 對北韓 市場 開拓을 漸次的으로 擴張함은 물론 終局的으로는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이 이렇게 南北韓 兩側에 모두 經濟協力關係를 가질 때 日本의 위치는 韓半島問題에 關한 다른 強大國(美.蘇.中)과 조금도 손색이 없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日本의 核開發로 因해 오늘날 韓國이 지니고 있는 美國의 核兩傘이 日本의 그것으로 代替된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問題는 4大國間의 미묘한 關係와 韓日間의 特殊한 歷史的 脈絡이 얽혀있어서 그 可能性이 매우 적은 것 같다.

Ⅲ. 中·蘇의 對「아시아」政策 概念

韓半島의 平和體制를 前提할 때 우리는 中共이나 蘇聯의 對「아시아」戰略이라는 要因을 特別히 重視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言及했듯이 中共이나 蘇聯은 分斷이라는 媒介를 通하여 事實上 韓半島에 對한 直接, 間接의 軍事介入을 前提하여 韓半島問題와 關聯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中共은 韓國動亂時 直接的으로 軍事的 介入을 한 國家이며 蘇聯은 武器體系의 供給이라는 間接的 方法으로 介入한 國家였다. 蘇聯은 動亂以後 오늘날까지 北韓의 軍事力 形成의 基本인 武器體系 支援 및 軍事援助를 繼續해왔다.

北韓은 그들의 「主体」 또는 「自主」路線에도 不拘하고 中·蘇 어느쪽이 든간에 軍事的, 經濟的 援助없이는 事實上 維持가 어려운 體制이며, 軍事的 「自衛」나 經濟的 「自立」이 極히 困難할 수 밖에 없다고 評價된다. 이는 곧 北韓을 中心으로 한 北方 三角關係가 北韓이 主唱하고 있는 「主体」의 原理만으로는 순탄한 解決이 어렵다는 것을 意味한다. 特別히 中·蘇紛爭은 이제까지 北韓의 安保體系를 形成해왔던 北方 三角關係를 破壞하는 要因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같은 事情은 北韓을 完全히 「딜레마」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여기서 注意할 點은 60年代 北韓의 「딜레마」였던 中·蘇紛爭의 余波가 오늘날 南韓에도 닥쳐오고 있다는 點이며 우리로서는

「아시안」集團安保는 아직도 그 内容이 애매하며
 나 實際上 그 構想의 内容은 具體的인 것이 아니었다. 「브레즈
 大会에서 「브레즈니프」가 提案한 内容으로 처음 詳히졌다. 그리
 蘇聯의 「아시안」集團安保構想은 1969年 6月7日 世界 共產黨
 解決이라는 問題와 關係를 결부시켜서 그 意味를 찾아보자.

파악하고 이러한 分析을 通해서 나온 結論을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여야 하는가? 優先 蘇聯의 「아시안」集團安保構想을 論理的으로
 保「構想을 具體的으로 우리의 對蘇 接近을 爲해서 어떻게 받아들
 우리는 蘇聯의 對「아시안」政策의 基本이 될 「아시안」集團安

가. 蘇聯의 「아시안」集團安保構想과 韓國

아가리 한다.
 가 廣汎한 새로운 課題으로써 對中·蘇外交의 出發點을 짚어보고 넘
 을 重點的으로 檢討하고 韓半島 平和體制를 前提로 하는 우리外交
 라는 面에서 蘇聯의 「아시안」集團 安保構想과 中共의 平和五原則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의 對中·蘇外交 可能性과 問題點이
 體制 또는 平和體制 構成에 核心的 課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어떻게 볼때 우리의 對中·蘇外交 接近은 韓半島의 새로운 安保
 課題와 關聯되는 것이다.

이를 解決하는 原理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外交의 基本的
 것이다. 이는 韓國으로서 解決해야 할 不可避한 問題이며 따라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問題가 優先 제기되고 있는

더우기 그 目的이 뚜렷이 表現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點에서 볼때 現在로써 蘇聯이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의 大体的인 윤곽은 그것이

첫째, 蘇聯이 「아시아」에 對하여 關心을 積極的으로 表示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과.

둘째, 蘇聯은 그와같은 構想을 通해서 「아시아」에서 美國이나 中共의 勢力을 排除하고 蘇聯의 外交利益과 「세계모니」를 강약해 보려는 強力한 意思表示를 하고 있다는 點이다.

事實上 蘇聯은 「브레즈네프」의 그와같은 構想이 나오기 以前까지만 해도 對「아시아」政策에 있어서 별다른 內容의 變化없이 特別히 中·蘇紛爭과 關聯하여 軍事的 戰略을 重視해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蘇聯은 中·蘇紛爭이라는 60年代의 새로운 要因으로 말미암아 蘇聯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아시아」가 얼마나 重要한가 하는 點을 認識하게되고 이를 契機로 하여 積極的인 對「아시아」政策을 展開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처하게 됐던 것이다.

「브레즈네프」·「코시긴」政權이 1960年代末부터 積極的인 外交政策을 展開한 것도 對「아시아」政策의 一기반을 確立하기 爲한 것이었다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이 갖는 輪廓과 目的은

1969年 5月 29日字 「이스베스차」紙와 同年 6月 8日字 「프라우드」紙의 論文에서 잘 明示되고 있다. 卽 그 內容을 보면,

“이 地域에 있어서의 外國軍事基地의 철폐는 集團安全保障을 創設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境遇 自由를 얻은 「아시아」諸국은

半島에 있어서의 어떤 政治的 解決을 가상할 때 그에 대한 影響

이러한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의 理論과 現實은 우리 韓
活潑히 하고 있다.

가고 있으며 특히 韓國과 越南과도 非公式的인 하나 그 接觸을
「말레지아」, 「싱가폴」 등과의 經濟, 政治關係를 發展시켜 나
國家와도 점차로 그 接觸을 強化하여가고 있다는 點이다. 「필립
이러한 原則과 명령에서 주목할 點은 蘇聯이 「아시아」의 反共
며 여기에 平和共存과 民族自決原則이 첨가되고 있다.

侵. ③內政 不干涉. ④完全한 平等과 互惠에 기초한 經濟協力등이
합하면 ①國家間 武力行使의 拒否. ②主權의 尊重과 國境의 不可
그 具體的인 內容은 아직 애매하지만 現在까지 나타난 것을 綜
容은 무엇일까?

그러면 蘇聯이 構想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의 基本的인 內
과 中共의 勢力排除를 目標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由安保라는 外交論理와 構想을 부산시켜 「아시아」에 있어서 美國
있음이 명백하다. 여기서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은 「아시아」集
또는 「好戰的 反動」 또는 「反人民的 意圖」은 中共을 지칭하고
여기에서 「帝國主義勢力」은 美國을 지칭하는 것이며 「膨脹勢力」
여 왔고 또한 할것이다. 「라고 하고있다.

保障을 보다 信賴할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기 爲하여 協力하
戰的 反動的 反人間的 意圖에 反對하여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
음모를 분쇄하게 될 것이다. 蘇聯과 다른 社會主義諸國은 好
힘을 합하여 平和를 強化하며 帝國主義勢力과 膨脹勢力의 그 어떤

력의 행사로 나타날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蘇聯의 그러한 構想을 韓半島問題 解決이란 觀點에서 有利하게 活用, 消化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의 核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에 對해서 두가지 側面에서 接近이 可能할 것이다.

그 하나는 同 構想이 내포하고 있는 中共勢力에 對한 抑止目標을 어떻게 對應해갈 것인가 하는 問題다. 卽 北韓이 60年代를 거치면서 같은 社會主義體制를 갖는 北方 三角關係를 중국적으로 消化하지 못하고 겪은 「딜레마」로써 남아있는 中·蘇紛爭을 우리의 對蘇外交에서는 어떻게 處理해갈 것인가 하는 問題다.

둘째로 問題되는 것은 「아시아」集團安保 構想에서 現在까지 밝혀진 그 構想의 外交的 原則과 原理가 우리의 統一原則 또는 南北關係의 새로운 原則과 一致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이를 對北韓 政策의 一環으로 活用할 수 있느냐 하는 可能性의 檢討이다.

첫째 問題로서 中·蘇紛爭이란 「딜레마」는 事實上 韓國으로서는 解決할 수 없는 「딜레마」인 同時에 北韓 스스로도 解決할 수 없는 「딜레마」였던 것이다. 다시말해서 中·蘇紛爭은 60年代를 通하여 終국 北韓을 政治的인 「딜레마」로 몰고왔던 主要 原因이 있으며, 現在 韓國으로서도 對中·蘇 接近이라는 必然的 過程에 介入되는 가장 困難한 問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韓半島의 平和化와 이의 國際的 保障이라는 問題에서 볼때 中·蘇間의 紛爭關係가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 方向으로 表現될 것인가는 注目을 要하는 事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中·蘇紛爭關係수에서 있는 韓國의 政策의 立場을 考慮할 때 몇가지 政策的 選擇을 現實的으로 生覺해 볼 수 있다. 그 基準은 무엇보다도 北韓이 중국적으로 中共에 依存할 것인가 아니면 蘇聯에 依存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勿論 여기에서도 中·蘇의 對한 우리의 接近政策은 지나치게 中共 또는 蘇聯 어느 한쪽의 對우릴 수 없다는 基本的 立場을 견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中·蘇紛爭에 對應할 一般的 外交接近의 자세는 中·蘇에 對하여는 嚴格한 中立의 立場을 견지하는 선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中·蘇 어느 한쪽의 對우쳐 外交를 展開시킨다면 반드시 中共 또는 蘇聯 어느 한쪽이 北韓을 각각하여 分斷의 緊張을 造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境遇가 된다면 對하여 中·蘇에 接近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며 對中·蘇 外交의 效果를 期待하기는 어렵다고 評價되는 것이다.

둘째로 中·蘇紛爭이란 「딜레마」에 對應할 基本的인 問題點과 進行해서 考慮해야 할 點은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 構想의 內容이 韓半島問題解決에 있어 우리 立場이나 主張과 外交의 利害의 共通點이 있는가 하는 問題다. 即 앞으로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解決에 있어서 우리의 政治的原則과 現在까지 發表된 「아시아」集團安保 構想의 內容 相容하고 있는가가 問題인 것이다.

事實上 「아시아」集團安保의 原則이라고 하는 內容들은 「武刀不行使」, 「國境不可侵」, 「民族自決原則」, 「平和共存」, 「經濟協力」과 같은 表現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形式論理上으로는 韓半島

의 平和化에 一致하지 않는 条項은 없다. 또한 그 現實的 根拠가 없지않은 것은 「아시아」集團安保의 構想이나 諸条項이 基本的으로 蘇聯의 極東政策의 基礎인 中·蘇國境의 固定化와 安定化라고 볼 때에는 이 原則은 休戰線의 現狀固定 또는 平和化와 連結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中·蘇國境의 平和化原則이 金日成의 現狀打破를 前提로 하는 軍事統一政策과는 最少限 一致할 수 없으므로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과 우리의 政策과는 最少限 正面 배치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에는 아직 그 뚜렷한 윤곽을 表現하지 않고 있으며 몇가지 問題가 있다.

첫째 集團安保機構라면 그 機構的인 性格을 規定할 수 있는 具體的인 內容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둘째로는 韓國의 境遇와 같이 韓·美 軍事同盟關係를 安保의 基本으로 하고 있는 立場에서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機構를 수락할 때 韓·美防衛條約등은 어떤 影響을 받을 것인가가 問題이다. 事實上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가 이러한 韓·美防衛條約의 解体를 前提로 한다면 우리의 安保解体를 強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問題는 「아시아」集團安保의 性格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그것이 그 어느 國家든지 假想的 適對의 對象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勿論 蘇聯이 中共封鎖라는 視點에서 出發한다면 韓國으로서는 中·蘇에 對한 中立的 立場과 全面背馳되며, 오히려 韓半

島問題解決에 威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中·蘇紛爭을 韓半島問題 解決속에 끌어들이는 必要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問題点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現實的으로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韓半島 平和化에 活用할 수 있겠는가? 眞지하게 檢討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中共의 平和五原則과 韓國

中共이 1955年 4月 「인도네시아」의 반등에서 亞·阿諸國을 지휘하면서 國際的 諸問題 解決策의 原理로서 제시한 것이 所謂 中共의 「平和五原則」을 中心으로 한 것이었고 이 平和五原則은 와늘에와서 美·中共政治 妥結에서도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基本的인 要素로 持續돼 오고 있다.

中共은 平和五原則을 이미 1954年 4月 中共과 印度間에 「티베트」問題에 對한 妥結의 原則으로 提示한 바 있다. 中共의 平和五原則은 ① 領土主權의 尊重, ② 不侵略, ③ 不干涉, ④ 平等互惠, ⑤ 平和的 共存이었다.

이 原則은 1954年 6月에 中共의 周恩來가 印度를 訪問했을때 그것이 中共·印度뿐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他國民에게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보다 廣範圍하게 認定된다면 戰爭에 對한 恐怖는 消滅하고 國家間의 協力の 精神이 擴大될 것이라고 闡明하여 이를 「네루」首相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平和五原則은 다시 1954年 6月 28日 「버마」의 「랑군」에서 있었던 「周·「누」」聲明에서 다시 確認되었다. 以後 이 原

이러한 形式論理을 떠나서 對中共關係 設定에는 美·中共關係속의

것은 優先 形式論理上으로는 없다고 봐야한다.

五原則의 새로운 展開는 우리의 平和, 共存, 統一原則과 相馳하는

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中共의 現狀固定을 前提로 할때 平和

은 그 政治的 展開에 있어서 現狀固定的인 性格이 뚜렷한 수밖

定化가 그 本質이 될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平和五原則의 性格

壓力을 政治的으로 避하는되는 現狀打破的 性格이 아니라 現狀固

를 수 있다. 中·蘇國境에서의 軍事的 對峙에서 蘇聯의 軍事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問題는 亦是 中·蘇紛爭의 性格에서 찾아

中共의 平和五原則이 어떻게 展開될 것이며 對外政策의 性格이

는 것이다.

的, 展開의 性格이 韓半島問題解決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하

점에서 平和五原則을 어떤 目的을 爲해서 展開할 것이며 그 政治

것은 平和五原則의 形式論理가 重要な 것이 아니라 中共이 이 時

을날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摸索하고 있는 時점에서 重要な

北共同聲明의 統一 또는 平和原則과 蘇聯의 背馳가 없다. 또 오

이러한 形式論理上的 對外政策 論理는 韓半島의 平和化와 7.4南

中共의 對美接近外交의 基本原則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中共이

中共의 平和五原則은 美·中共의 聲明에서도 잘 表示되고 있으며

서 基本論理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을 한 것이 事實이며 오늘날 形式論理上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

則은 "集團平和"의 構想으로서 1954年 印尼休戰의 重要な 役割

韓國이라는 틀속에서 中共의 對韓政策意圖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71年 8月 10日字 「뉴욕·타임스」의 「레스톤」記者와 周恩來 中共首相과의 會見에서 中共은 처음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具體的으로 提議했다. 周의 提議는 極其히 具體的인 것이었다. 即 그 提議內容은 韓半島에 있어서 「언커크」나 「유엔」機構는 事實上一方的 機構이기 때문에 앞으로 韓半島問題解決의 機構로서는 不適當하며 그 대안으로서 韓半島問題를 政治的,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爲한 「南北韓 兩者委員會」를 提議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南北韓 兩者委員會」가 現在 「南北調節委員會」의 基本原理와 關與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周恩來는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爲한 보다 重要한 原理를 提議하였다. 그것은 만일 美軍이 完全히 韓半島를 떠날때에 韓·日條約을 基本으로 하거나 그것을 利用하여 日本에 依한 韓國浸透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하는 問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問題는 中共이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爲한 두가지의 基本原理를 提示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엔」機構라는 것을 排除한 것으 이내 中共이 事實上 그들을 侵略者로 規定했던 「유엔」의 常任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時点에서 韓半島問題의 韓國化라는 民族自決原則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中共이 韓半島에 對한 勢力排除 (Disengagement) 過程에서 日本의 介入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韓半島問題

解決의 미묘한 點까지 論議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意味에서 보면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解決의 本質을 前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韓半島에 對한 日本의 不介入 要求는 事實上 中共으로서는 韓半島의 民族自決原則을 통한 「緩衝地帶化」를 提議한 것이나 다른 것은 아니며 장차 어떤 「中立化」의 可能性도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으로서는 周邊地帶가 中共에게 敵對的인 性格의 軍事基地로 되는 것을 防止하거나 이미 敵對的인 軍事基地化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中性化하는 것이 中·蘇의 軍事的 대치에서 기인하는 壓力에 적절히 對應하는 筈인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周邊國인 韓國에 對해서는 勿論 相對的인 軍事的 緊張要因이 되고 있는 北韓을 包含한 全韓半島의 軍事的 緊張緩和와 平和的 問題解決을 바라고 있다.

다. 對中·蘇外交의 論理

그러면 우리는 왜 中共과 蘇聯에 接近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外交目標과 論理에 關한 根本的인 질문이다.

우리의 對中·蘇外交目標은 北韓의 軍事統一政策, 即 休戰線의 軍事的 現狀打破政策을 中·蘇의 「現狀固定化」라는 原則과 韓國의 平和共存, 統一이라는 原則의 合勢로 抑制하는데 그 一次的인 目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二次的인 目標은 韓半島問題의 平和化를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 함에 있어서 필히 中·蘇

이다.

韓半島가 過去의 歷史처럼 國際政治上의 消極的 機能으로 紛爭의 媒介가 될 것이 아니라 보다 能動的으로 "平和地域"으로서 "平和 的 機能"을 다할 수 있는 東部「아시아」平和의 核이 될 수 있 는 歷史的 使命을 다할 수 있는 論理와 意慾을 바라봐야 할 것 이다.

있 다.

차이에도 不拘하고 對中·蘇外交의 可能性과 根柢가 있다고 볼 수 로 中·蘇自身の 平和化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理念과 體制의 關係의 平和的 構造化와 이의 國際的 保障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尙자의 南北韓關係를 規定할 때 그것은 韓半島뿐 아니라 韓 國의 對中·蘇外交의 具體化를 위한 最終目標은 南北韓 關係의 軍事體制에 對한 抑止, 解除의 第一歩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此 部分의 要素이며, 또한 對中·蘇의 平和保障은 南北韓 關係의 平和的 構造化와 이의 國際的 保障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韓半島의 새로운 安保組織에 對한 國際保障이란 것 하더라도 中·蘇의 保障이 없이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깨어질 수 없다. 事實上 韓半島에 있어서 實際 自主的인 平和化가 成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 外交原則과 互相되는 平和保障을 可能한限 確保하는데 있다고

IV. 韓半島 平和構造的 代案

韓半島 安全保障은 거의 완벽한 國際保障에 依하여 平和가 維持 되어 온 安全體制였다.

韓半島의 軍事分界線인 休戰線의 管理는 「유엔」이란 法的 性格 과 「유엔」에 이라는 實質上 保障에 依하여 進行되어 왔다. 特別 韓半島의 軍事力은 兩韓과의 法的 責任이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란 當事者와 法的 責任이 發生한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即 北韓은 兩韓과의 關係에 있어서 政治的인 側面은 물론이려니와 軍事的 側面에서도 無責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1953年에 締結된 「休戰協定」이라는 韓半島의 安全保障條約은 다 破壞되었던 北韓의 政治·軍事體制를 원격하게 保護하여 온 機能을 遂行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實質上 1953年以來 南北韓의 勢力均衡을 維持시켜 주면서 北韓 이 安全保障機構이었다고 볼 수 있다. 逆으로 兩韓의 立場에서도 法的으로나 實質上에 있어서나 지금까지 安全保障의 責任을 「유엔」

「이란 機構에 맡겨 왔었다고 할 수 있다. 安全의 保障에 對한 核心인 兩韓의 軍指揮權이 「유엔」에 關한하여 놓여 있으며 더욱 「休戰協定」의 直接的 當事者가 아니라는 點에서 休戰線에 對한

管理는 거의 全的으로 「유엔」 停戰委員會에 委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事實上에 있어서 兩韓도 北韓에 對한 政治的 軍事의 責任을 지 고 있지 않아 왔으며 無責任의 狀態에서 20年間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南北韓은 同時에 韓半島의 安全保障에 對하여 無責任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혹 休戰線에서 武力衝突이 發生하여 충격전이 發生하였을시에도 그 責任은 南北韓當事者가 아니라 國際的 保障機構인 「유엔」休戰委員會에 그 責任이 轉겨져 온 것이다.

韓半島의 安全保障은 實質上 「유엔」이란 法的性格과 美軍을 主軸으로 하는 「유엔」軍이란 保障策에 依하여 維持되어 왔으며 南北韓은 相互間에 責任을 지지 않는 體制였던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韓半島의 安全은 완벽하게 國際的保障에 依하여 構成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現속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國際保障이라는 韓半島 安全保障體制에 本質的 變化가 發生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가 美軍의 撤收이며 또 하나가 언젠가 다가올 「유엔」이란 法的 保障의 性格과 美軍이라는 두 要因이 變化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點次로 過去 韓半島의 安全을 維持시켜온 「國際保障」이 해체되어가기 시작하고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그 時機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韓半島의 安全에 對한 國際的 保障의 해체는 過去 南北韓間에 無責任할 수 있었던 南北의 關係 또는 南·北 各體制間의 安全에 對한 根本的인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의 安全에 對한 國際的 保障을 休戰線으로부터 거두어갈때 韓半島의 安全 即 南·北韓의 安全은 무엇에 依하여 保障되어야

하는가하는 것이 問題点으로 提起되는 것이다.

엄격한 意味에서 「유엔」이란 國際保障은 北韓을 보다 保護하여 주는 性格을 띠고 있었으며 6.25 동란 直後부터 南韓의 強化된 軍事 또는 反共体制로부터 保護를 받으면서 「유엔」이란 安全機構 없이 오늘과 같은 北韓의 軍事·政治体制를 構成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想想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事實上 美軍은 南韓을 保護한다는 性格과 同時에 6.25 以後 強化된 軍事·政治体制가 北韓에 미치는 強力한 影響을 「統制」하는 役割도 하여 왔다는데서 오늘에 와서 이러한 北韓의 安全을 어느 面에서 保護하여 주던 國際保障이 休戰線上에서 사라질 때 南·北韓은 國際保障을 대신하는 그 어떤 安全体制의 새 出発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은 스스로도 自己安全에 대한 責任을 물으며 反省해야 할 時機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平和條約」이 「유엔」扉을 몰아낼 수 있다는 公式的 論理만을 갖고서 北韓의 安全은 물론 南北韓關係의 安全維持가 어렵다는 點을 認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國際的 保障」이 点次 사라질 때 南北韓은 自己들 責任下에서 安全을 維持할 수 밖에 없다는 데서 바로 「不可侵協定」이라는 國際保障 아닌 「自体保障」을 決意해야 할 時點에 이르는 것이다.

「國際保障」이란 安全体制와 機構가 休戰線上에서 빠져 나갈 때 南·北韓만이 남게 되며 南·北間의 生存과 平和를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하는 問題가 바로 提起되는 것이다.

「南北韓不可侵協定」은 「國際保障」을 대신하는 그 第1步로서 「自体保障」의 礎出點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南北韓은 공히 國際保障이란 혜택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며 이 要因이 바로 오늘날 南北韓의 접촉을 促進시킨 媒介體였기도 한 것이다.

「南北韓不可侵協定」이란 國際保障을 대신하는 「自体保障」이 不可避하다는에서 그 論理와 根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가.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本質

實質上 모든 「不可侵條約」은 終局的 意味에서 安全의 保障은 될 수 없는 것이다.

「不可侵條約」은 相互間에 侵略을 하지 않는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써 締結當事者間에 戰爭의 可能性을 排除하자는 安全保障에 한한 軍事的 條約의 一種이다.

「不可侵條約」이 戰爭을 防止하거나 阻止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보장책도 못되는 것이다.

「不可侵條約」은 어떤 두 國家間에 있어서 軍事的 均衡이 成立되거나 또는 軍事的 優位에 대하여 相互 恐怖를 품고 이에 대한 相互間的 保障策을 구할때 成立할 수 있는 것이다.

「不可侵條約」은 이러한 恐怖의 相互均衡 또는 政治的인 心理的 均衡을 合法化시켜주는 것이 「不可侵條約」이며 軍事均衡을 基礎로 하여서만이 成立할 수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으며 그 軍事均衡을

相互間에 合法化해가는 過程이 「不可侵條約」의 本質인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軍事의·心理的 諸均衡 要素가 깨어질 때에는 「不可侵條約」은 한낱 休紙종이에 불과할 수 밖에 없고 우세한 一方이 「不可侵條約」을 폐기하게 되는 것은 外交史에서 쉽게 그 例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不可侵條約」은 두 當事者間에 侵略없겠다는 意思 또는 할 必要性의 除去와 實質上 軍事均衡을 基礎로 하면서 이를 合法化하는 것이지 「不可侵條約」 그 자체가 侵略을 防止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不可侵條約」當事者의 一方이 「不可侵條約」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保障策이란 軍事的 對抗밖에는 없기 때문이며 그 어느 一方이 폐기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不可侵條約」의 本質的 弱點인데도 不拘하고 「南北韓不可侵協定」이 提起하는 問題點은 무엇일까하는 것이다.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提議은 우선 「6.25 宣言」등을 包含하는 長期的이며 總括的인 政策의 布石이란 觀點에서 보아야 하며 결코 「南北韓不可侵協定」만을 유리시켜 보아서는 안된다.

「7.4 南北共同聲明」이나 特히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基本的 政策과 論理는 「平和共存」이라는 政治的 論理인 것이다.

事實上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은 한마디로 集約한다면 平和共存 理念의 提示였다태 「平和共存」理念의 前提는 南北에 「現狀維持」(Status-quo)였고 「現狀維持」政策의 核心은 休戰線을 사이

에 두 体制가 當分間은 相互 認定하고 平和的 共存을 바탕으로 하여 「戰爭政策」의 포기를 提議하였던 것이다.

本質的으로 「7.4 共同聲明」그 自体가 훌륭한 「不可侵條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도 역시 「不可侵條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明白하다.

「南北韓不可侵協定」이 「7.4 共同聲明」이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等과 다른 點은 要約하여 朴大統領이 定한協定으로서 南北韓의 最終的 責任者가 署名을 한 責任있는 文書가 아니라 一種의 諜報活動의 所産에 그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어떤 意味에서 「7.4 南北共同聲明書」는 嚴格한 意味의 法的 文書는 아닌 것이며 一種의 「暗黑」을 前提로 하는 合意文書에 不 過한 것이었다.

물론 「7.4 南北共同聲明書」의 發表形式이나 內容 등에서 政治 的 效果는 거둔 것이 事實이나 끝까지 法的 性格은 不明確한 것이었다.

그러나 「南北不可侵協定」의 提議는 朴大統領 스스로의 最終責任 者에 依하여 提議되었으며 따라서 「南北不可侵協定」의 他方의 最終 的 責任을 지는 署名者는 北韓의 金日成自身일 수 밖에 없다는 提案의 論理的 歸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이 點에서 「南北韓 不可侵協定」과 先行된 南北間의 제조치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 며 그 처리과정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南北韓不可侵協定」은 반드시 直接的인 形式이든 間接的인 形式

이든 間에 남북한수뇌회담이 그 處理過程에서 實踐될 수 밖에 없으며 「南北韓不可侵協定」이 進行될려면 남북수뇌회담이라는 단순한 會談이 아니라 「平和會談」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一連의 諸 措置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은 明白하다.

이번 「不可侵協定」의 提議는 朴大統領 스스로가 北의 수뇌인 金日成에게 直接的으로, 하나의 法律的條約을 提議하였다는 點에서 本質적으로 先行된 諸 提案이나 宣言과는 다른 點이며 이 點에서 「南北韓不可侵協定」은 重大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最小한 南北韓當事者間의 直接的 責任下에서 「不可侵條約」에 署名하는 말이 된다.

또한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提議는 단순한 政治的 「제스처」로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이 언젠가 休戰線에서 國際保障機構라는 「유엔」의 性格이나 美軍이 빠져나갈 때에 休戰線의 直接的인 責任者 即 戰爭에 對한 責任을 南北當事者 스스로가 질 수 밖에 없는 論理的 帰結이 되기 때문이다.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政治的 意味와 그 核心은 金日成 스스로가 韓半島의 平和나 戰爭이나 第二次 民族戰爭을 다시 再發할 것인가 아닌가하는 問題를 論할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하는 問題이며 우리 民族全体가 金日成 自身の 意思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核心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意味에서는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提議는 實質上的 南北韓 수뇌會談의 提議일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南北韓 수뇌會談의 상징적 意味로 해석할 수 있다는 點이며 또 이것이 그 核心일

위하여서는 金日成体制는 基本政策을 修正해야 한다는 論理가 엄격히 正面으로 背馳되는 政治的 原理이며 따라서 「共存」을 받아들이기 事實上 「共存」理論은 北韓이 現在까지 進行하여온 基本政策과는

크게 相 異한 것인가에 대한 疑問의 餘地가 없고 볼 수 있다. 「理論은 北韓의 戰爭政策이나 革命理論과 어떻게 異치로나마 調和시 反應을 보여주어도 非論理的 反應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역시 「共存 北韓이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의 그의 反應을 주지한 것이나 또 는 것이 그 基本 原理로서 「共存」理論이 提示되고 있는 것이다.

에 對한 軍事力 또는 政治力에 의한 現상타파정책은 相互 對峙의 「平和共存」이든 「경제적 共存」이든 혹은 「協力的 共存」이든 間 互定하지는 提議이며 비록 그 공존의 性格이 「힘의 共存」이든 「南北韓不可侵協定」의 內容의 本質은 南北韓의 「共存」原則을 相 은 누구나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平和共存」原則은 北韓의 軍事統一政策의 포기를 요정하는 原理인 로 「平和共存」原則의 提示와 認定에 있는 것이다.

이었다. 武力不行使의 原則과 內政不干渉의 原則은 實質上 한마디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서 申明되었고 강조된 바 있는 原則

여기에서 첫째조항과 둘째조항은 이미 「7.4 南北共同聲明書」나 이라도 現行休戰 協定을 遵守할 것等 제가되었다.

約束할 것, 둘째, 相互 內政不干渉을 하지 않을 것, 셋째, 어떠한 境遇 容을 보면 첫째, 南北이 서로 武力侵略을 암했다는 것을 萬天下에 그 政治的 意味를 떠나 「南北韓不可侵協定」에 內包될 구체적 內 수 있는 것이다.

개입되는 根本的이며 體制上의 本質的 問題와 結付되는 것이다.

體制上의 本質的 問題와 結付되고 있다는 點은 現在까지 逆理의 으로 北韓體制를 結果的으로 保護하여온 「유엔」軍 또는 美軍이 金日成의 「平和協定」提案으로 現實的으로 물러갈 때 北韓의 「安全」(Security)은 體制上 어떤 影響을 입을 것인가를 北韓은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評價를 내릴 수 있는 轉換點에 이르른 것이다.

金日成의 北韓住民에게 接近하는 統治權力の 論理는 「美帝國主義」가 「南朝鮮을 強占」하고 있다는데 모든 論理를 歸結시켜 오고 있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머지 않은 將來에 美軍 또는 「유엔」의 性格이 韓半島에서 이탈하여 갈 때 南韓의 軍事的 또는 政治的인 相對的 壓力를 받아야할 時點에 이르러 「共存」이나 「戰爭」이나를 決定해야 하는 또다른 北韓의 統治權力の 새 論理가 準備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北韓의 統治權力の 論理는 南韓에 美軍이 存在하니까 戰爭體制를 견지해야하며 따라서 北韓住民의 모든 「에너지」를 戰爭準備에 동원하는 強制的 論理의 根拠로 삼아 온 것이다. 그러나 美軍이 南韓에서 軍事力이란 形式을 벗어나는 撤收가 實踐될 때 北韓은 그의 體制上의 問題와도 깊은 關連을 갖게 된다.

더욱 南韓의 軍事的·政治的 힘과의 國際保障없는 直接的 對決은 北韓의 安全을 동요케할 수 있는 主要因이 되며 이 要因이 거꾸로 美軍의 撤收를 口頭로는 부르짖으면서도 事實上 韓半島에 「美軍없는 安全保障」의 維持를 「共存」을 통하여 實踐하는데 北韓의

「躊躇」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도 「南北韓不可侵協定」을 선뜻 받아 들일 수 없는 論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評價해 볼 수가 있다.

다음 셋째 條項인 「如何한 境遇라도 現行 休戰協定을 遵守할 것」이라는 條項이다. 「休戰協定」의 遵守條項은 새로운 南北韓關係形成의 接近方法에 관한 問題이다.

「休戰協定」을 「平和體制」로 轉換시키기 위하여서는 세가지의 接近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休戰協定」4條60項의 南北統一을 위한 「政治會談」 開催에 들켜는 「休戰協定」5條62項의 休戰協定을 變更시키기 위하여서는 「수정·增補·平和解決을 위한 適當한 協定中の 規定에 依하여 明確히 交替될 때」를 두고 있다.

넷째로는 「休戰協定」과는 全然 별도로 하여 南北韓間에 合意文書化함으로써 「休戰協定」과는 分離시켜 「平和體制」를 進行시키 나가는 接近方法이다.

「休戰協定」을 「平和體制」로 移行하여 가는데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提案內容은 그의 接近方法에서 休戰協定과 並行하여 가자는 方法으로 볼 수 있다. 事實上 休戰協定の 遵守없이는 「不可侵條約」은 물론 北이 말하는 「平和條約」은 어림도 없는 일인 것이다. 「休戰協定」이란 一時的인 政戰協定도 遵守할 意思가 없이 하물며 南北韓의 基本的이며 自體的 保障을 相互約束하는 「不可侵條約」이나 「平和協定」이 遵守될리는 없는 것이다.

실은 「休戰協定」 그 自体는 폐기되지 않고 尙今 有效하고 있

있으나 「休戰協定」의 많은 重要條項이 폐기되어 왔다. 例로서 北韓이 「平和協定」에서 主張하고 있는 武器不導入問題만 하더라도 「休戰協定」二條十二項(a.b.c.d.r.h.i.j)은 구체적으로 武器의 不導入 監視·規制를 條項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오늘에 와서 完全히 폐기된 條項으로 되어 있고 北韓의 遵守不履行에서 起因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休戰體制」에서 「平和體制」로의 移行에서의 接近方法은 「不可侵條約」이든 「平和條約」形式이든간에 「休戰協定」의 基本的인 遵守없이 「休戰體制」에서 「平和體制」로 移行할 수 없는 必須的인 大前提인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不可侵協定」이라는 論理的 平和體制接近方法에서 그 基本要件으로 「休戰協定」의 遵守를 提示한 것은 正當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事實上 「休戰協定」의 막바로의 「代案」이란 形式은 實質上 南北調節委員會의 相當한 운영의 進展등이 없이는 힘든 일을 北韓도 認識해야 할 일인 것이다. 더욱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의 正常化를 拒否하고 있는 이상 「休戰協定」과 「南北韓不可侵協定」은 代案的이 아니라 並行하는 平和體制의 接近方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임을 明白히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妥當한 方法일 것이다. 「休戰協定」의 代案은 南北調節委員會의 진전한 正常化를 受諾할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가 四次에 걸친 戰爭을 經驗하고 얻은 結論은 겨우 「非武裝地帶」의 設置와 「유엔軍배치」

라는 해결이었으나 이는 우리가 20여년전에 이미 얻은 결론을 「이스라엘」과 「아랍」國家가 4차에 걸친 戰爭 끝에 얻은데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韓半島의 「平和体制」를 設計할 南北間의 平和機構인 「南北調節委員會」라는 훌륭한 機構를 갖고 있고 그 속의 休戰協定을 對身할 수도 있는 南北間에 「合意된」軍事分科委員會 等 5個分委가 密연히 法的으로 組織되어 있는 것이다. 南北調節委員會의 具體化와 그 機能化는 곧 平和体制의 憧憬일 수 있는 것이다.

나. 「南北韓不可侵協定」의 諸 問題點

앞에서 論한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本質과 關聯하여 몇가지 問題點을 結論으로 論하여 본다.

우선 「南北韓不可侵協定」의 提議에 對하여 美國의 反應에 關한 問題點이다.

美國은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가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存하는 「休戰協定」의 代案(Alternative to Armistice)으로의 重要한 第一歩이며 現在 南과 北에 依하여 각기의 「不可侵協定」이 提示되었다고 論評함으로써 美國으로서는 北韓의 「平和協定」과 「南北韓不可侵協定」을 同一範疇로 보고 있다는 點이다.

美國의 反應은 따라서 北의 「平和條約」을 공격한 우리側 立場과는 甚히 相異하게 다르다는 點이다. 앞으로 韓·美間의 「休戰体制」해체와 「平和体制」의 構成에서 그 接近方法의 差가 發生하지 않겠는가 우려되는 問題點이다.

둘째로 우리側이 「南北韓不可侵協定」을 提議할 時 實質上 이번 「不可侵條約」의 提議는 큰 意味를 띠고 있으며 결코 「제스처」로 끝날 수 없는 問題다. 그 理由는 가까운 時日內에 「유엔」의 休戰線管理의 法的 地位도 달라지면서 休戰體制에 대한 「對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美國의 反應에서도 明白히 表示되고 있다. 國際保障이란 休戰線상의 「메카니즘」을 거두어 갈때 「不可侵條約」은 現實問題化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셋째로 「不可侵條約」이건 不可侵條約의 性格을 띠는 「平和條約」이건 間에 南北間의 實質上 軍事均衡이나 政治心理的 均衡을 維持할 「暫定協定」이 南北調節委員會를 通하든 그 어떤 形式으로든 可能한가 하는 問題이다.

事實上 北韓의 軍事力은 「數的 優位」에서 「戰略的優位」로 옮겨가면서 그의 軍事力을 軍事的 「均衡主義」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가령 例를 들어서 「미그」21의 數的 優位는 물론이려니와 「미그」기 的 發進基地를 休戰線部近에 基地化하며 特히 작전기지화할 때 이미 南北軍事均衡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軍事的 공격에서 「軍事的 위협」(Military threat)으로 發展하고 있으며, 軍事力을 「위협」이란 政治的 手段으로 使用할 때 「不可侵條約」의 基本理念은 成立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處理할 수 있는 南北間의 「軍事均衡主義」에 입각한 暗黒」 또는 「暫定協定」이 成立할 素地가 어떤 經路든 構成되어야 하는 것이 「不可侵條約」의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도 「不可侵條約」과 「平和條約」의 差는 無意味하다. 다만 그 「條約」의 內容이 어떻게 規定되느냐 하는 「政治的 의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用語上의 意味는 無意味하다.

北이 말하는 「平和條約」은 美軍과 「유엔」機構를 全廢하기 위한 것이 그 의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反對일 뿐이다. 南北韓이 基本的으로 合意해야 할 點은 역시 「不可侵」과 「基本關係」다. 다만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가 問題다. 北韓은 基本關係를 「연방제」로 「커버」하면서 장차의 南北紛爭은 「國際問題라」하여 休戰線이란 政治的 秩序의 線을 突破할 때 「내란」으로 規定해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北韓도 社會主義建設과 社會의 安全을 前提한 南侵인 것인데, 오늘날 現實과 같이 南侵이란 戰爭行爲가 평양도 전면파괴를 면할 수 없고보면은 戰爭抑止의 合理的 合意가 成立해야 할 時期인 것이다

南北韓이 戰爭을 통하여 公히 民族的 沒死를 초래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共存」理念을 기초로하는 「不可侵」이란 論理밖에는 우선의 한반도問題의 自主的解決의 길은 없는 것이다.

V. 韓半島 平和体制의 基本方向

平和体制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方向에서 구축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緊張緩和와 現狀維持가 現時点에서 韓半島 平和体制의 가장 基本的인 条件이요, 前提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美·日·中·蘇 4大國의 對韓半島政策의 共通的인 特徵은 緊張緩和와 現狀維持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現狀은 脫冷戰時代의 全世界的인 趨勢와도 一致하여 상당한 期間동안 繼續될 것으로 보아도 無理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4大國의 利益이 一致되고 있는 이러한 緊張緩和와 現狀維持에 逆行하고서는 어떠한 平和体制도 現在로서 韓半島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과 關聯하여 南北韓의 平和政策은 좋은 對照가 될 것 같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半島의 平和를 이룩하는 方法으로서 韓國은 南北韓間의 不可侵條約을 提起하고 있으며, 北韓側은 「平和條約」을 내세우고 있다. 平和條約이나 不可侵條約의 核心은 南北韓을 遲延시키고 있는 지금까지의 「休戰條約」에 依해 管理되어 온 非武裝地帶」를 어떻게 政治적으로 規定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韓國側이 提示한 不可侵條約은 休戰体制의 內容을 그대로 移讓받아 어느側이고 非武裝地帶를 打破하려 할 때는 「侵入」이라는 法的構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休戰線의 現狀을 政治적으로나 軍事的으로 保障할 것을 그 核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側의 平和條約의 內容은 「非武裝地帶」를 「聯邦」이라는 政治的 解決을 干先시켜 놓고 이를 통해 「國內的 秩序의 線」으로 化하자는 것으로써 實質的으로 南北分斷의 現狀의 變更을 目標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南北韓의 平和政策을 比較할 때 일단은 韓國의 政策이 4 大國 關係와 보다 接近하는 政策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可侵條約의 論理를 緊張緩和라는 또하나의 國際的 條件과 연결시켜 韓半島의 平和를 구축하는 方向으로 전개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國內外的 措置가 따라야 할 것 같다.

먼저 國際的으로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위한 4 大國間의 어떠한 形態로든 合意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合意는 UN 과 같은 國際機構가 참여하여 集團的 措置로서 韓半島의 平和를 保障하는 경우도 있고, 南北韓間의 不可侵條約을 4 大國이 承認하고 이를 保障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4 大國이 어떠한 國際會議를 통하여 韓半島問題에 合意에 이를 수도 있다. 어떠한 形態로든, 어떠한 國際的 合意가 이루어지는 것이 南北韓간의 現狀打破를 抑止하는 좋은 길이며, 또 이점에서 4 大國의 利害가 어느 정도 一致하므로 可能的 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國際的 緊張緩和를 南北韓 平和體制 구축에 順機能的으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南北韓의 對話 및 어느 정도의 人的, 物的 交流가 不可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南北韓關係의 緩和가 없는 現狀維持만의 「平和」는 4 大國에게 그들의 國際的 共存政策을 위협하는 要素로서 認識되어 不安感을 줌으로써 韓半島平和體制

구축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不可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韓半島의 周辺情勢 즉 美·蘇·中·日의 4 大國關係가 緊張緩和와 現狀維持를 特徵으로 하는 한 이에 南北韓關係가 適應함으로써 消極的 意味의 平和는 어느 정도 達成될 수 있다 하더라도 序論에서 밝힌 바 있는 積極的 意味의 平和 즉, 堅實한 平和에 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統一이라는 問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卽 이러한 消極的 平和를 어떠한 統一政策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南北韓關係의 極端的인 理念對立과 팽팽한 勢力均衡을 中化시키는 좋은 處方으로서 韓半島의 中立化 統一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 南北韓 雙方이 이러한 統一을 받아들이지 않고, 特히 現狀維持를 추구하는 4 大國이 現狀變更이 確實한 那樣 統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中立化 統一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節次와 복잡한 過程을 必要로 하는 바 南北韓의 離散家族찾기라는 간단한 問題조차 合意가 어려운 現 時点에서는 非現實的인 方案이라 할 수 밖에 없다.

中立化統一이 이렇게 非現實的인 旨을 認定한다면 나머지 統一方案은 民主化 乃至 非共產化統一 아니면 共產化統一이라는 두 가지 길 밖에 남지 않을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韓國이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共產化統一을 받아들이지 않고, 北韓側 역시 韓國의 民主化統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分明하며, 4 大國도 各各 이에 反對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統一方案의 積極的 추구는 오히려 平和보다는 南北韓의 對立을 主張시킬 것이 確實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現在로서는 南北韓이 各各 民主化統一과 共產化統一을 추구하되 일단은 相互間的 平和共存을 받아들이면서 平和的인 競争을 통한 統一을 目標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끝으로 그렇다면 南北韓 雙方은 서로 相對方的 存在를 認定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緊張緩和나 平和的 共存을 통한 統一中 어떤 것도 南北韓이 相對方的 存在를 否認하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은 많은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점에서 北韓側의 政策은 最近 數年間 一貫性 없는 混亂을 보이고 있다. 即, 그들은 1970年度 以前에는 現在의 韓國政權과는 어떠한 交渉도 할 수 없다는 態度를 보이더니 그 後 南北對話에 應하여 이러한 態度를 바꾸는 듯 하다가 對話가 교착상태에 빠진 후에는 다시 韓國의 存在를 否認하는 狹善的 態度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UN에 北韓이 韓國과 同時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의 聲明과 北韓을 條約의 一方當事國으로 하는 不可侵條約을 提議함으로써 北韓의 存在를 묵시적으로 認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問題는 北韓의 態度이며, 韓國側의 경우에는 일단 政策路線의 指針은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의 課題는 이러한 政策의 표방을 相對方이 信賴할 수 있도록 具體的인 行動表示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北韓側도 이에 同意하도록 誘導하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北韓 地域에 共產主義者들이 상당히 確固한 基盤을 구축하였고 分斷 近

30年間 北韓의 現 體制에 利益을 느끼는 強力한 既存體制가 成
立되어 있다는 現實을 깊이 認識해야 할 것이며, 逆으로 南韓地域
에도 北韓共産主義者들의 이른바 「南朝鮮革命」 方法이나 其他 如
何한 侵略企圖에 依해서도 붕괴될 수 없는 強力한 政治體制가 健
在하고 있음을 北韓側이 認識하도록 努力해야 될 것이다.

VI. 結 論

以上の結論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政策指針을 提示할 수 있다.

첫째, 上記와 같은 平和体制의 구축은 相當한 時間을 要하는 問題로서 결코 性急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最終的인 問題點은 北韓이라는 相對를 어떻게 우리의 平和構造에 이끌어 들이느냐 하는 說得의 問題인데 이러한 說得은 時間이 걸리기 때문이다. 說得, 特히 國際關係에서의 說得 (Persuasion) 에는 口頭上의 「코뮤니케이션」 (Verbal Communication) 에 依한 方法과 非言語的 「코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에 依한 方法이 있을 수 있는데 「토마스. 쉐링」 (Thomas Schelling) 이 指摘한 바와 같이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口頭로서 전달하는 方法은 相對側을 說得시키거나 믿게 하기 어렵고 非言語的 方法 即, 具體的 行動을 통한 의사표시가 가장 効果的인 說得力을 가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側의 政策도 言語上으로는 相當한 正道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으나 行動을 통한 의사전달과 說得에는 아직도 未洽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勿論 北韓側이 韓國의 어떤 好意的 措置에도 應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說得은 꾸준한 忍耐를 가지고 相對方에게 多樣한 信號를 보내어 意圖를 打診하고, 또 우리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長時間을 두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說得의 方法은 非言語的인 것이 效果가 있을 뿐 아니라 間接的인 方法이 效果的이기 때문에 北韓을 韓國이 直接的으로 理解시키기 보다는 第3國을 통한 우회적 方法으로 이러한 說得에 努力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은 相對方 本人의 直接的인 의사표시보다는 第3者를 통해서 그의 見解를 전달해 줄 때 더욱 이를 信賴하는 一般的 傾向은 心理學的으로 認定된 原則이며, 特히 國際關係에서 紛争集團 或은 敵對關係에 있는 集團 間의 意思傳達은 第3國에 의한 仲介가 가장 效果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考慮할 때 韓國이 北韓側을 說得할 수 있는 좋은 道路로서 韓國의 友邦國인 美國이나 日本을 통한 意思傳達 方法이 있으며, 中共이나 蘇聯을 통한 方法(韓國이 中, 蘇와 正式 非公式으로 相當한 關係增進을 이룩하는 境遇), 또는 印度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非同盟國家를 仲介者로 하는 說得方法도 效果的일 수 있다.

끝으로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을 위해서는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우리 友邦國의 對北韓接近을 沮止하려고 努力하는 우리의 政策을 再考해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理由가 있다.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北韓을 說得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美國이나 日本이 北韓과 關係를 갖는 것이 매우 有利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對北韓 接觸이 平和體制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많은 學者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北韓을 여러가지 方

法으로 國際社会에 露出시킴으로써 北韓의 폐쇄성과 好戰的 態度에 變化를 일으킬 可能性을 期待해 볼 수도 있다.

勿論 우리側이 美·日 對北韓接近을 反對하는 것은 이와 相應하는 中·蘇의 對韓國 門戶開放이 없는 狀態에서 美·日의 北韓과의 接近은 韓國을 孤立化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있음은 事實이다. 確實히 그러한 狀態는 오히려 北韓의 南韓赤化野慾을 북돋아줄 可能性이 없지 않으며, 따라서 韓半島平和에 위협적 要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韓國에 一次的인 既存關係와 利益이 있는 美國과 日本이 北韓과의 關係를 맺었다해서 그러한 關係를 韓國에 不利한 方向으로 放置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기 中·蘇가 韓國과의 어떠한 關係擴大를 留保하고 있는 것도 韓國이 美·日의 北韓接近을 沮止하고 있는데 대한 反作用일 수 있는 것이다. 如何든 北韓에 美國과 日本이 들어가 그들의 市民이나 外交官이 그곳에 駐在하게 되는 경우, 北韓은 결코 오늘날과 같이 好戰的 姿勢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面에서 볼 때 美·日의 對北韓 進出은 여러 가지 모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推進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